

# 야권 “檢 ‘김건희 명품백’ 영터리 면죄부... 특검해야”

민주 “감사 표시라는 궤변”  
“검찰이 특검 필요성 입증”

조국당 “권력 앞에 애완견”  
“윤·김 쌍특검 필요해”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이 영터

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국민권의 위원회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 밖에 되

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써부터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 데 누구 멋대로 감사 표시냐’, ‘법보다 여사’라는 조롱과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이런 결론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장 등 수사팀을 싹 갈아

치운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형사1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 수석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신고 의무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도 씻어줬다”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으니 위반사항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론과 닮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들께선 다 아는데 검찰만 모른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형배 “죄송하고 감사...호남 위해 치열하게 일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민형배(광주 광산출·사진) 의원이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 시도민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민 의원은 “지도부에 입성하라고 광주 전남 지역민이 밀어줬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실패한 도전이었지만 검찰개혁과 호남의 가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호남 정치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민주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라며 “저까지 포함해 4번 연속 호남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고 모두 실패했다. 호남의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함께 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호남의 전략적 중



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호남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외면할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지금처럼 호남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외쳤던 검찰개혁과 호남 정신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하루빨리 끌어 내리고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삼겠다”며 “민주당이 호남의 정신을 우선 가치로 삼고 호남의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이재명·조국 맞손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

## 안도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추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 남구출·사진)은 21일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 과표 3억원 미만



(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원~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현행 자녀상속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세의 자녀공제액(현행 5000만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석하 영광군수 후보 “농어민 수당 확대”

진보당 이석하(사진) 영광군수 후보는 지난 20일 영광군 염산면 두우어촌계를 찾아 ‘어촌어민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영광군 농어민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할 것’을 공약했다.

진보당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주민발의조례운동을 통해 농어민 수당 도입을 추진했다. 농어민수당은 현재 11개 광역시도 120여 시군 지자체로



확대·시행 중이다. 이석하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어촌 자원 보호를 위해 현재 시범 사업 중인 ‘폐어구 수집 실명제’를 전체 어촌계로 확대해 어촌계 공익기능을 제대로 보상하겠다”며 “수산업경영인회, 어민회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어민 숙원사업을 직접 정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 이재명 2기, 기존 당직자 대거 유임 ‘안정’ 방침

### 지명직 최고위원 재지명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2기 지도부’ 후속 인선을 단행했다.

김우영 정무조정실장과 한민수·황정아 대변인 등 기존 당직자가 대거 유임되면서 첫 당직 인선처럼 ‘안정’에 방침이 짙었다는 평가다.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도 기존 인사가 재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조직사무부총장에는 황명선 의원,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박지혜 의원,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위원장, 대변인에는 한민수 의원과 황정아 의원을 임명했다. 이들 모두 유임이다. 김우영 정무조정실장도 유임됐다.

국민소통위원장엔 김현·전용기 의원을

공동발탁했고, 대외협력위원장엔 김현정 의원을 임명했다.

법률위원장엔 기존 박근택·이용우 의원을 유임한 데 더해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이태형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이정문 의원이 임명됐다.

임광현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상임부의장에 임명해 조세와 재정 예산 측면에서 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임 의원은 국제정찰장 출신이고 조세전문가이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예산전문가”라며 “두 분이 조세와 재정, 예산 측면에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데 적임자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상황실장으로 정을호 의원과 박선원 의원을 임명했다.

윤리감찰단장과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장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석담 변호사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과 갈등경영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장운경 소장을 임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당의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만큼,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는 새 지도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당 지도부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없는 광주·전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지금같은 인사 기조대로 직전 최고위원들이 다시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강민구·전은수 전 최고위원을 1기 지도부 마지막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했다.

강·전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취약지역인 대구와 울산 출신으로, 특히 전 전 최고위원 지명은 여성 청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 위원직 “여야, 제3자 추천방식 특검 합의해야”

### 회담 결과 따라 중재안 판단

위원직 국회의장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3자 특검은 한 대표가 이야기 한 것이고 야당도 3자 특검에 동의하니 여당이 (법안을) 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정도면 굉장히 접근한 것이니 양당 대표가 충분히 토의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하라고 국민이 합의

한 수준”이라며 “(국회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는 25일 여야 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회담 결과에 따라 중재안 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야 회담) 특검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속에서 국정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 합의가 어디에 이를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